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5-직권-00008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고등학교 학생들
피 조 사 자 ●●●(○○고등학교 교사, 인성인권부장)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는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하여 학생들의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학습에 관한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양심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으므로, 피조사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과 더불어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나. 학교 전반에 만연한 체벌 및 학생 인권 경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대책(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유사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 1 -

다.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해당 학교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교에 '기관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고등학교장에게,

가. 피조사자가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피조사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이를 묵인한 학교 구성원들과 위와 같은 행위를 당연시하는 위 학교의 문화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이므로,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나.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인권 침해행위에 노출된 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할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하고 치유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다. 인권교육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실시 배경과 목적

2015. 11. 5.(목),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학생인권교육센터

터”라 한다)에 ‘○○고등학교 교사가 일상적으로 체벌, 폭언(욕설)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초조사를 한 결과, 그 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학생들이 다수라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직권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조사하였다.

2. 직권조사의 방법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5. 11. 13.(금) 직권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26.(목)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한 후, 같은 해 12. 16.(수)~17.(목), 12. 24.(목) 관련자 면담조사 및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II.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별지1]와 같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데, 당사자 및 관계인들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임을 감안했을 때,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생략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조사자의 문답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면

- 3 -

담내용,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인정사실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체벌행위 관련

가) 피조사자는 자신이 체벌도구로 사용하는 매를 ‘큰사랑’, ‘작은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당구큐대 하단에 하트 그림을 크게 그려 놓고 이를 ‘큰사랑’이라고 부르고, 비교적 작은 매(나무 재질로 된 것)는 일명 ‘작은 사랑(하트그림을 작게 그려 놓음)’이라 하며, 위 체벌 도구에 하트 그림 외에, ‘사랑의 매(이하, 체벌 도구는 “매”라 칭함)’라고 적어 놓았으며, 매는 인성인권부실에 보관하고 있다.

나) 체육관에는 매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체육관에서는 주로 테니스채를 체벌 도구로 사용하였다.

다) 2014년 피조사자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을 체벌하였다.

(1) 2014.경 체육시간에 학생들이 테니스채로 장난을 치면, 테니스채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엉덩이 등을 때렸다.

(2) ‘□□□ 학생(여학생)이 교복을 잘 안 입고 다니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학교 1층 홈페이지에서 매를 사용하여 위 학생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3) 2014. 3. 셋째 주경, 체육 수업시간에 체육복을 검사하여 체육복 안에 교복 와이셔츠를 입은 여학생들을 적발하고, 해당 학생들의 엉덩이를 테니스채로 1대씩 때렸다.

(4) 2014. 초여름 경, ‘◇◇◇ 학생(여학생)이 실내화를 신고 매점에 간다’는 이유로, 위 학생의 엉덩이를 테니스채로 1회 때렸다.

(5) 2014년 초, △△△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1층 홈페이지 의 자 바깥쪽에서 누워서 떠들고 있었는데, 피조사자가 오자 다른 학생 들은 다 일어났으나 △△△ 학생이 일어나지 않자, 피조사자가 등산 화를 신은 발로 위 학생의 머리를 툭툭 쳤다.

(6) 체육복 바지를 입고 하교하는 여학생(성명불상)을 보고, 신발 장 앞에서 발로 위 학생의 엉덩이를 차면서 “입지 말라”고 말했다.

(7) 2014. 4. 초순경 금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담배를 피우고 온 ▽▽▽ 학생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테니스채 손잡이를 위 학생의 입에 넣었다.

(8) 2014. 4.경 ‘○○○○, ㉠㉠㉠ 학생이 잔디공사를 새로 한 운동장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위 학생들에게 슬리퍼를 손에 끼고 네 손발로 기어, 운동장을 한 바퀴 돌도록 하였다.

라) 2015년 피조사자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을 체벌하였다.

(1) 2015. 10.경 소변검사에서 학생들이 검사 키트를 빼돌린 것이 적발되었는데, 피조사자가 “하루의 시간을 준다”고 하면서 “빼돌린 학생이 자수하면 봐준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 학생 등 4명의 학생이 자수하자, 피조사자는 매를 사용하여 위 4명의 학생 중 ㉠㉠㉠, △△△ 학생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렸다.

(2) 2015. 상반기 경, ㉠㉠㉠ 학생이 ‘자신이 담배를 피웠다’고 자진 신고하자, 해당 학생을 복도로 내보내 7-8교시 동안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앉아 있게 하였다.

(3) 위 (2)항과 관련하여, 8교시 도중, 방송실로 ㉠㉠㉠ 학생을

- 5 -

포함한 5~6명의 학생들(흡연 관련)을 오게 하여, 위 학생들을 ‘엎드려 뺨쳐’ 시키고 매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10대씩 때렸다.

(4) 2015. 10. 중순 경, ㉠㉠㉠ 학생 외 3명의 학생이 교실에서 ‘원카드 게임’을 하는 것을 적발하고, 카드 주인인 위 ㉠㉠㉠ 학생을 복도로 내보낸 다음, 위 학생의 엉덩이를 매로 20여 대 때렸다.

(5) 2015. 10. 말 경 위 학교 인성인권부실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 학생에게, “니 꺾간한 사고라도 치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양호실 쪽 벽에 밀친 후, 매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7대 가량 때리고, 매 끝부분으로 위 학생의 멍치를 수회 찼다. 이후 피조사자는, 위 학생에게 인성인권부실 앞 복도에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였다.

(6) 2015. 10. 셋째 주 경 인성인권부실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 학생에게 ‘엎드려뺨쳐’를 시킨 뒤, 매로 위 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4대 때렸다.

(7) 2015. 2.경, ‘□□□ 학생(여학생)이 친구 ㉠㉠㉠과 장난을 치다 창문 밖으로 책을 던졌다’는 이유로, 위 □□□ 학생의 엉덩이를 매로 4~5회 때렸다.

(8) 체육시간에 ‘2단 줄넘기’ 50개를 하지 못하거나, 배구 서비스를 못 넣는 학생들을 테니스채로 3~5회 가량 때렸다.

(9)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말려야 하는데 못 말렸다’는 이유로, ○○○ 학생(흡연하는 학생들 옆에 있었으나, 실제로 흡연을 하지는 않은 학생)의 엉덩이를 매로 때렸다.

(10) 인성인권부실 앞 복도에 학생들(㉠㉠㉠ 등)이 앉아있으면,

- 6 -

피조사자가 매로 학생들의 머리를 한 대씩 때리고 가곤 하였다.

(11) 욕설을 하거나 슬리퍼를 신고 매점을 간다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들에게 “이 악물어” 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위 학생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12) 2015. 6~7.경, ‘㉠㉠㉠’ 학생이 학생부실 앞을 지나가면서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결재서류판으로 위 학생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학생이 쓰고 있던 안경을 부숴다.

(13) ‘㉠㉠㉠’ 학생이 점심시간에 먼저 나와 밥을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학생에게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2바퀴를 돌게 하였다.

2) 핸드폰 강제 잠금해제 후 내용 확인 관련

‘2015. 9.경, 천변에서 학생들이 술을 먹다가 교장선생님을 보고 도망갔다’는 제보를 받고, 피조사자는 ㉠㉠㉠ 외 다수의 학생이 대상자임을 확인한 다음,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핸드폰 잠금을 풀라’고 하였으며, ‘㉠㉠㉠’ 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핸드폰 화면을 늦게 본다’는 이유로 때렸다.

3) 일괄 소변 검사 관련

가) ○○고등학교는 ‘2015년 금연심화학교’로 지정되었고, 해당 프로그램에 학생 소변검사에 대한 계획은 없다.

나) 2015. 8. 중순경 위 학교 1,2학년 전체 학생(남녀)을 대상으로 2회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피조사자는, ‘소변검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흡연자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위 동의서를 제출받아 실질적으로 소변검사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소변 검사를

- 7 -

한 결과, 학생 300여 명 중 20여명이 흡연학생으로 적발되었다.

다) 피조사자는, 소변 검사를 위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남학생들의 성기를 보고,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했다.

4) 학습권 및 휴식권 침해 관련

가) 2014. 1학기에 피조사자는, ‘㉠㉠㉠, ㉠㉠㉠’ 학생이 떠들고 잠을 자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학생부실 앞 복도에서 쉬는 시간 없이(점심을 먹는 시간 제외)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고,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조사자가 위와 같이 한 것은, 생활지도를 할 때 다른 학생들에게 일종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나) 2015년에 피조사자는, ㉠㉠㉠, ㉠㉠㉠ 학생들에게, 강당에서 방송장비(학생들을 모아놓고 생활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를 설치하는 등의 일을 시켰는데, 피조사자가 위 학생들에게 일을 시킨 시간은 학생들의 수업 시간 중이었고, 위 학생들은 수업을 빠지고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다) 2015년에 피조사자는, 위 ㉠㉠㉠, ㉠㉠㉠ 학생들에게, 저녁시간과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학생들의 수행평가 입력 작업을 시켰다.

5) 강제 소지품검사 관련

가) 피조사자는 불시에 교문 지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의 가방을 임의로 뒤져, 강제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나) 선도부원들을 시켜 학생들의 몸을 뒤지게 하였다.

- 8 -

다) 2015. 5.경 피조사자는, '○○군 군립도서관 2층 열람실에, 담배를 피우다가 도망친 학생이 있다'는 이유로, 위 열람실에 있는 학생들의 가방을 강제로 검사했다.(피조사자는 '○○고등학교 학생들 30여명 가량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가방만 검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서약서 작성 개요

가)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 97조에 의해 조치(징계)를 받으면, 피조사자는 해당 학생에게, “본인은 학생인권규정 절차에 의해 학칙 제97조 00항에 해당된 0월 0일 징계(조치 내용)을 인정하고, 추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학생인권규정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학생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나) 피조사자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한 장 혹은 여러 장의 ‘학생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7) 부적절 발언 및 폭언 관련

가) 2015년에, ‘커피 볶는 집’이라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 학생에게, “네 나이 때 용돈 안주면 다 부모 잘못이다.”, “너희 부모님이 알바하게 두냐, 너희 부모님이 잘못됐다.”, “집에 돈 없냐”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나) □□□, ◇◇◇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지 않으면 자퇴시킨다”라고 말했다.

다) 학생들이 배구 서브에 실패하면, “담배를 피워서 서브를 못

- 9 -

넣는다”고 말하고, “담배로 폭력이 시작되고”, “모든 범죄는 담배로 시작된다”, “돈 없으면 담배 훔치고”라는 등의 말을 학생들에게 했다.

라) 학생들에게, “xx xx”, “개만도 못한 xx”, “개xx”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욕설을 했다.

마) 2015. 9.경 □□□ 학생(여학생)에게, “넌 앞으로 치마 입지마라”, “치마 입은 것 목격하면 맞는다”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강당에 전교생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를 통해 위 학생에게 “모두의 눈에 불편하다”, “바지 좀 사와라”, “바지 살 돈 없냐” 등의 말을 했다.

바) 2015년 ◇◇◇ 학생이 기숙사를 퇴소한 후 위 학생에게, “너는 너희 엄마가 내놨냐”, “느그 엄마 옆으로 가라” 등의 말을 했다.

사)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을 때, 특정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너 00이랑 헤어진 애!”라고 부르고, “너 누구랑 사귀지. 곧 헤어지겠네”, “CCTV를 돌려봤는데 2학년 A양과 B군이 홈페이지에서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아) 피조사자는 학생들이 누구랑 사귀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언제 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8) 여학생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등 관련

가) 2014년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교복을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학생들의 체육복 지퍼(상의 목 부분에 있음)를 내렸다.

나) 점심시간에 여학생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고 운동장

을 같이 돌아왔다.

다) 운동장에서 걸을 때 피조사자가 여학생을 뒤에서 꺾어안았다.

라) 여학생이 잘못해서 학생부실에 오면, “뽀뽀하면 봐줄게”라는 말을 했다.

마) 테니스 체육 수업을 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고, 운동장을 돌면서 여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였으며, 그중 ■■■ 학생의 엉덩이를 자주 두드렸다.

바) 보건실(학생부실이 붙어있음)에 여학생들이 ‘소화가 안 된다’고 손을 따달라고 오면, 매실엑기스나 가스활명수를 여학생들에게 주고, 여학생들의 손을 주무르거나 등을 쓰다듬고 두드렸다.

사) 2014. 6~7.경 야간자율학습시간에 ■■■ 학생을 학생부실로 불러 1:1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 시간은 총 30분 정도였다. 당시 피조사자는 상담 전 저녁을 먹으며 술을 1~2잔 정도 마신 상태였다.

아) 위 사)항의 상담 시 피조사자는 위 학생의 얼굴(광대뼈 부분의 살)을 살짝 깨물었고, 그 결과 위 학생의 얼굴에 자신의 이빨 자국이 생기자, 놀라서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문질렀다.

자) 위 사)항의 상담이 끝나고 해당 학생이 학생부실에서 나갈 때, 피조사자가 가만히 서 있는 위 학생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

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4조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9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할 수 없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학생의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학생은 모욕감 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체벌은 학생의 인격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선

택하는 등 최소한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례 제5조는 학생의 학습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를 말하는데,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¹⁾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하는 경우, 가해자는 교사라는 우월지위에 있어 이를 이용하여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교사에 비해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피해의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일상적 차별) 관련

피조사자는 위 인정사실 1)-가), 나)항의 매나 테니스채 등을 사용하여, 위 인정사실 1)-다)-(1), (2), (3), (4), (7)항 및 1)-라)-(1), (3)~(10)항과 같이 학생들을 때려 학생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고, 위 인정사실 1)-라)-(12)항과 같이 ‘결제서류판’을 사용하여 학생을 때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조사자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발, 손)를 사용하여 위 인정사실 1)-다)-(5), (6)항, 1)-라)-(11)항, 2)항과 같이 학생들을 폭행하였다.

또한, 위 인정사실 1)-다)-(8)항, 1)-라)-(2), (5)(인성부실 앞 복도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한 행위), (13)항의 행위는, 피조사자가 학생들을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살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를, 얼마나, 그 정도 등을 특정하여, 피조사자에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적시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이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조사자는 “때려서라도 가르쳐 달라는 학부모들이 있어,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체벌하고 있으며, 학생이 원해서 때린 적도 있다”, “본인도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체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체벌을 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 1)-다)-(8)항(학생의 손에 슬리퍼를 신겨 네

손발로 기어 운동장을 돌게 한 행위), (7)항(흡연을 이유로 학생의 입에 테니스채 손잡이를 강제로 넣은 행위)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각종 체벌의 범주를 훨씬 넘어 학대행위에 가깝다고 보이고, 현행법상 금지된 체벌이 보호자의 요청이나 피조사자 본인의 감정 등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체벌행위를 직접 당한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이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은, 체벌로 인한 육체적 고통의 차이만 있을 뿐, 그로 인한 심리적 효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위 학교 학생들의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위 학생들 모두 “폭력(체벌)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므로, 피해학생은 체벌의 당사자였던 위 인정 사실 1)-다), 라)항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위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조사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를 침해하였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거나 기록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 메시지, SNS 활동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은 개인의 은밀한

- 15 -

영역으로,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 2)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게 하여 동의 없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사용하여 학생 생활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 등 다수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피조사자는 인정사실 5)항과 같이, 등교하는 학생들의 책가방을 열게 하여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선도부 학생들을 시켜 학생들의 몸을 뒤지게 하였으며, 군립도서관 열람실에서 임의로 학생들의 가방을 검사하였는데, 이는 당사자의 동의도 없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 학습에 관한 권리 및 휴식권 침해

가) 위 인정사실 1)-라)-(2), 1)-라)-(5), 4)-가)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을 수업에 들여보내지 않고 짧게는 2교시 혹은 4교시, 길게는 일주일 동안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받아야 할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하여 해당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 16 -

또한, 위 인정사실 4)-가)항의 경우, 학생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강요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위 학생들의 휴식권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조사자는 위 인정사실 4)-가)항과 같이 한 이유를, ‘다른 학생들에게 일종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우발적,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조사자가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판단 하에 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하고 복도에서 벌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교사나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등 학교구성원들이 이에 대하여 제지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해당학교에는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를 용인 내지 묵인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인정사실 4)-나), 다)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조사자는 □□□□ 학생에게 수업시간, 저녁시간, 야간자율학습 시간 등에 일을 시킴으로써 위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특히, 위 인정사실 4)-다)항과 관련하여, ‘수행평가 입력’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평가권의 내용으로서 학생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업무임에도, 이를 학생에게 시킨 것은 교사의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볼

- 17 -

수 있다. 따라서 교사 본인의 직무를 학생이 대신하도록 하는 일이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나 건강상태, 정치적·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²⁾하고, 생체정보(지문, DNA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언제든지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자기정보 통제권’ 또는 ‘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³⁾

위 인정사실 3)-나)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소변검사 동의서’를 받아 ○○고등학교 전체학생들의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소변은 개인의 건강상태, DNA 등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인 되는 ‘생체정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학생)이 그 정보의 제공 여부 및 제공된 정보가 어떤

2)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결정

3) 헌법재판소 위 결정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 3)-나)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강제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변을 제공하고 검사를 받도록 한 후, 그 검사결과를 흡연예방교육 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위 학교 학생들의 “(생체)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에서 교육목적 달성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도 활동을 할 수 있고 흡연 단속이나 금연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흡연 단속이나 금연지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4)-다)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 □□□□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를 입력하도록 시켰는데, 이는 피조사자가 직접 하여야 할 업무로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평가 대상이 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것에 해당하고,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해당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양심의 자유 침해

조례 제16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양

- 19 -

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6)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조사자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한 장 혹은 여러 장의 학생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해당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인격권 침해

위 인정사실 3)-다)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화장실에서 남학생들의 성기를 보고 그 크기에 대하여 말하는 등 개인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비록 그것이 장난이라거나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말을 들은 학생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런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도 있으나, 진술한 학생들이 특별히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인격권” 침해로 검토하였다.)

또한, 위 인정사실 7)항의 경우,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충분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 인정사실 7)-마)항과 같이, 전교생이 강당에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여학생에게 “넌 앞으로 치마입지 마라”, “모두 눈에 불편하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에게 직접적인 체벌 또는 욕설을 한 것보다 더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 20 -

행위라고 보이고, 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볼 수도 있다.

7) 성폭력 관련

일반적으로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그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여성 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조사자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었던지는 주된 고려 사항이 아니다.⁴⁾

위 인정사실 8)-가)항과 같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의(체육복) 목 부분의 지퍼를 내릴 경우에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성

4)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성희롱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①육체적 성희롱(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언어적 성희롱(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등), ③시간적 성희롱(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전해 주거나 외설적인 책이나 글을 보게 하는 것,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등)으로 구분하여 판단함.

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 8)-나), 다)항과 같이, 남자교사가 여자고등학생과 학교에서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고,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껴안은 경우에,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고등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 8)-라)항과 같이, 남자 교사가 여자 고등학생에게 “뽀뽀하면 봐줄게”라고 말한 것은, 설령 이것이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성적인 농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말을 들은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언어적 성희롱”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8)-마)항과 같이, 남자 교사가 여자 고등학생을 지도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엉덩이는 생식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고 신체의 민감한 부위이며, 그 부위를 타인이 만지거나 건드리는 경우,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위 인정사실 8)-바)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여학생들의 손을 주무

르고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조사자는 소화가 안 된다고 찾아온 학생들(보건실과 학생부실이 붙어있어 자연스럽게 아는 구조)의 건강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피조사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 8)-사), 아), 자)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학생과 야간 시간에 1:1 상담을 하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의 얼굴을 깨물고, 이로 인한 이빨자국을 지우기 위해 학생의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문지르고, 위 학생을 꺾안았다.

이는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시 상황을 보면 피조사자가 학생의 볼을 깨문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고, 둘째, 피조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상담을 하였으며, 셋째,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학생을 피조사자가 다시 꺾안았고, 넷째, 위 인정사실 8)-마)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조사자가 평소에 예쁘다는 이유로 위 학생의 엉덩이를 자주 두드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남자 교사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학생을 학교에서 성추행한 것이므로, 피조사자는 피해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23 -

8) 소결

피조사자는 ①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하여 학생들의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고, ② 강제로 학생들의 휴대폰을 열람하고, 강제로 소지품 검사 및 몸수색을 하여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③ 학생을 수업에 들여보내지 않고 학생부실에 일주일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일을 시켜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④ 강제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⑤ 수행평가 성적 입력을 학생들에게 시켜 수행평가 대상이 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⑥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강요하여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⑦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⑧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 및 행동을 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

피조사자는 위와 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조사자가 위 학교에서 10여 년간 인성인권부에서 일하면서, 체벌 및 폭언(무시하는 발언), 성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상적으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하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동료 교사 및 학교관리자들이 피조사자를 제지하거나 개선하

- 24 -

도록 하지 못해 그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등학교는 교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노출되었던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그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12.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임 송 (서명)

[별지1]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사생활의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가. ~ 다. (생략)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 5. (생략)

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27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 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 28 -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